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3년 4월 25일(목) 조간
담당자	윤희숙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02-958-4689, heesuk@kdi.re.kr)
배포일시	2013년 4월 24일(수) 09:30
배포부서	KDI 홍보팀(02-958-4030, press@kdi.re.kr)

중산층 현황의 다면적 분석과 중산층 확대 전략에의 시사점

윤희숙 연구위원

※ 본 논문은 5월 발간 예정인 『KDI 경제전망(2013. 상반기)』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1. 연구배경

- 새 정부는 중산층의 약화가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 아래 '중산층 복원'을 핵심적 정책목표로 제시
 - 중산층 복원에 이르는 주된 전략은 고용률 제고이며, 정책목표는 '고용률 70%를 통한 중산층 70% 달성'으로 요약됨.
 - 중산층 강화는 통상 별다른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데, 이는 중산층의 순기능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 걸쳐 형성된 인식이 호의적이기 때문임.¹⁾

1) ① 양극화된 사회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느 한쪽에 유리한 재분배에 역량이 소모되는 것과 달리 중산층이 탄탄한 사회는 민주적으로 형성된 공감대를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Alesina[1994]). ② 끈기 있게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기업가를 배출해 고용과 성장의 엔진을 제공하고(Acemoglu and Zilibotti[1997]), ③ 차별화된 제품을 위해 기꺼이 추가적 금액을 지불하는 소비자를 양산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Murphy, Shleifer, and Vishny[1989]). ④ 인적자본과 저축을 중시하는 중산층적 가치는 사회발전을 위한 장기적 자산의 원천이 된다(Doepke and Zilibotti[2007]).

□ 중산층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따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개선책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중산층의 몰락'이라는 진단이 어떤 측면에서 뒷받침되고, 이 중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

○ 중산층 개념 자체는 이질적인 뿌리들에서 파생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관심사가 무엇이고 어떤 중산층 개념을 차용하는지에 따라 문제인식에서부터 차이가 발생

- 일반 국민이 생활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수치상의 지표와 괴리되는²⁾ 일반적 경향 역시 중산층 개념의 차이에서 비롯됨.

- 사회학적 접근은 일정한 교육수준이나 사회적 지위와 결부되는 직종을 중시하며, 인내와 근면 등 이러한 직종을 갖기 위한 덕성을 강조하나,³⁾ 여기서는 경제력을 기준으로 하는 경제학적 접근을 다룸.

- 서비스업 확대와 기술발전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중산층의 개념 역시 진화 중⁴⁾

○ 따라서 전체 사회정책 속에 중산층 정책을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중산층의 다면성을 고려하여 현재 어떤 측면이 무슨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정책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

2) 복지패널조사에 의하면, 소득 3분위(중위 20%) 중 스스로 중간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5.4%에 불과하며, 하위에 속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8.9%에 이룸(부표 2).

3) 이는 경제학에서 인내심(patience capital)이나 활인율에 대한 선호 차이를 사회적 계층 분화의 원인으로 중요시하는 입장(Becker and Mulligan[1997]; Doepke and Zilibotti[2005])과도 상당 부분 시각을 공유.

4) 2013년 4월 발표된 영국의 'Great British Class Survey'는 상류층, 중산층, 하층으로 구성된 기존 분류에서 벗어나 엘리트, 전통적 중산층, 기술직 중산층, 근로자 상층(new affluent workers), 전통적 근로자층, 서비스업 근로자층(emergent service workers), 소외계층(preariat or precarious proletariat) 등 7계층을 제안하면서 명확히 정의되기 어려운 중산층의 복합적 성격을 강조("Great British Class Survey finds seven social classes in UK," *The Guardian*, 2013.4.3).

□ 고용률 제고전략은 다양한 사회정책적 목표에 기여할 수 있으나, 어떤 인구그룹을 타깃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각 정책목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적 시각을 유지할 필요

- 고용률 제고는 빈곤정책이나 중산층 확대전략,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국가혁신전략 모두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 전략임.
- 그러나 실제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구그룹을 우선적 타깃으로 삼을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구그룹별 타기팅의 효과 차이를 예측해 볼 필요

2. 중산층에 대한 다양한 정의 및 현황

1) '중위 60% 인구의 소득점유율' 기준하에서의 중산층 현황

□ 중위 60%를 중산층으로 간주하면서 이들의 소득점유율을 중산층 경제력 지표로 사용하는 방식은 전체 경제에서 중간계층에 귀속되는 경제력의 추이를 관찰하는 데 유용

-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점유비율을 소득분배지표로 흔히 사용하는 것은 상위 20%를 부유층, 하위 20%를 빈곤층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중위 60%를 중산층으로 간주
- 이렇게 중산층을 중위 60% 인구로 고정시킨 후 이들이 차지하는 소득 비중을 관찰하는 방식은 중산층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데 유용
- 중산층은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 비중이 높을 때 경제발전에 적합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공감대(middle class consensus)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중간층의 소득 비중은 정치경제학적으로도 중요
 - Easterly(2001)는 실증분석을 통해 중위 60%의 소득 비중이 경제발전 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입증

□ 우리나라는 현재 중위 60%의 소득 비중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며, 국가 간 비교에서도 중산층의 소득 비중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 『가구소비실태조사』와 『가계동향조사』상 중위 60%의 경상소득 점유율은 1996년 53.9%에서 외환위기 시 크게 줄었다가 2006년에 1996년 수준을 넘어선 이후 2011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는 데 반해 하위 20%의 소득점유는 1996년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표 1).⁵⁾

<표 1> 계층별 소득점유율

(단위: %)

	1996	2000	2006	2011
상위 20%	37.4	41.8	37.7	37.6
중위 60%	53.9	51.3	55.1	55.4
하위 20%	8.7	6.9	7.2	7.0

주: 가구경상소득을 균등화하고 개인화하여 구분한 각 계층인구의 균등화가구경상소득 점유율임.

자료: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가계동향조사』(2006, 2011)

- Luxemburg Income Study를 이용한 Atkinson and Brandolini(2011)와 가계동향조사(2012)를 이용하여 계산한 수치를 비교한 결과, 하위 20%의 소득 비중은 15개국 중 멕시코와 미국을 제외한 최하위로 나타난 반면, 중위 60%의 소득 비중은 덴마크와 스웨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음(부표 1).

5) 『가구소비실태조사』는 1인가구와 자영자를 포함한 전국 데이터이나 5년 주기로 제공되었고, 『가계동향조사』는 2003년 이를 승계한 조사이다. 최경수(2008)는 매년 제공된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해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중위 60% 소득점유율을 추적했는데, 여기서도 외환위기 시 급감한 중위 60% 소득점유율이 2001년 저점을 지난 후 2003년경 1997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본고와 마찬가지로 『가구소비실태조사』와 『가계동향조사』를 사용한 유경준·최바울(2008)에서도 1996년에 비해 2006년의 중위 60% 소득점유율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중위소득 50~150% 범위 내 인구 비중' 기준 사용 시 중산층 현황

□ 중위소득의 일정 범위에 속하는 사람을 중산층으로 정의한 후 이들 인구 비중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은 중산층 그룹의 확대나 축소 여부를 관찰하기에 유용

- 앞에서의 '중위 60%의 소득 비중'이 인구 비중을 고정시킨 채 여기에 귀속되는 소득 비중을 관찰하는 것과 달리, 소득 범위를 고정시키고 해당 인구의 비중을 관찰하는 방식은 중산층이 포괄하는 인구 비중의 변화를 관찰하는 데 유용
- 개발도상국의 경우 절대소득 기준을 사용하는 반면,⁶⁾ 경제개발이 진행된 국가의 경우 중간소득의 일정 범위를 기준으로 삼는 상대소득 기준을 사용
- 우리나라와 OECD는 빈곤이 끝나는 지점을 중산층의 시작점으로 삼으면서 중위소득 중심으로 이를 대칭적으로 적용한 '중위소득의 50~150%' 기준을 사용해 왔음(유경준·최바울 [2008]).⁷⁾

□ '중위소득 50~150% 내 인구 비중' 기준을 사용할 경우 우리나라는 중산층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1990년대 초반에 역전된 후 최근 약간 상승

- 1992년 중산층 비율(2인 이상 도시가구)이 76.3%에 도달한 후 2008년 66.3%까지 내려갔다가 소폭 상승하여 2011년에는 67.7%를 기록, 전체 가구는 2011년 64.0%

6) Milanovic and Yitzaki(2002)는 브라질과 이탈리아의 평균소득을 글로벌 중산층의 범위로 설정했는데, 이는 하루 소득 기준으로 대략 US\$ 12~50(2000년 PPP 기준)에 해당한다. 반면, 개발도상국의 경우 Banerjee and Duflo(2008)는 하루 소득 US\$ 2~10를, Ravallion(2009)은 US\$ 2~13을 기준으로 사용했다. 통상 개발도상국에는 US\$ 2 기준이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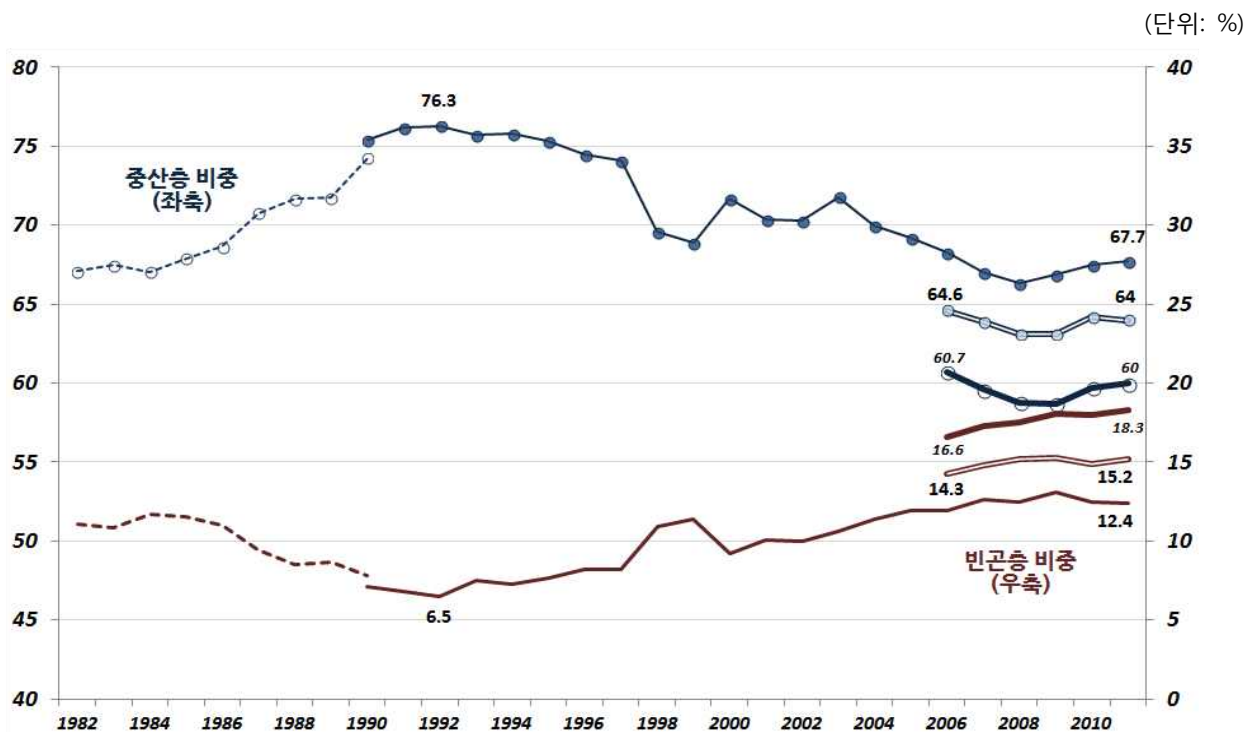
7) 반면, '중위소득의 75~125%' 기준(Thurow[1987])은 빈곤층보다 어느 정도 더 여유가 있어야 중산층이라 볼 수 있다는 인식의 차이를 반영.

○ 1980년대까지의 확대 추세가 1990년대에 역전된 이후 최근 악화 추세가 멈춘 것으로 보이나 이것이 추세적/일시적 현상인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른 시점

- 1980년대까지 중산층/빈곤층 비율 등이 개선된 것은 1차산업에서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으로 노동력이 이동하는 산업화 과정의 전형적인 추세임. 반면, 이후 탈공업화 과정에서의 분배 악화에는 산업구조 변화,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세계화, 기술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인식됨.

- 최근 중산층 비율은 시장소득 기준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빈곤율의 경우에는 시장소득 기준 시와 가처분소득 기준 시의 차이가 증가하고 있어 복지지출이 빈곤감소에 효과를 미친 것으로 추측됨.

[그림 1] 중산층과 빈곤층 비중 추이



주: 1) 2인 이상 도시가구 대상인 『도시가계조사』의 가구가처분소득 기준. 2006년 이후의 이중선은 1인 이상 전국 가구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의 수치(농가경제조사 포함). 굵은 실선은 시장소득 기준. 원으로 표시된 위쪽 3개의 선은 중산층 비중이며, 아래쪽의 표식 없는 선들은 빈곤율.

2) 데이터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1990년도 이전은 유경준·최마울(2008)의 수치를 연결. 이때 연결시점(1990년)의 수치가 약간 다른 것은 가구소득의 개인화 여부에 기인한 차이.

자료: 통계청(KOSIS).

3) '항상소득의 대리변수로서의 소비'를 기준으로 한 경우

□ 단기소득의 일시적 변동을 상쇄하면서 항상소득(permanent income)에 보다 잘 반응하는 소비지출을 이용해 중산층의 경제력 비중이나 인구 비중을 관찰할 수 있음.

- 개인의 경제력은 갇아야 할 빚, 축적된 자산,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 등이 종합된 개념이며 소득의 흐름이 쌓인 결과인 만큼, 단기적 소득은 이러한 경제력을 부분적으로만 표현할 수 있음.
- 적어도 평균적으로 개인의 소비결정은 일시적인 소득의 변동보다 본인의 소득능력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항상소득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인식됨.

□ 지난 20년간의 가구소비지출의 추이에서 중산층의 경제력 비중과 중산층 비중은 약간 상승했거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표 2).

- 가구소비지출⁸⁾ 기준 중위 60% 인구의 소비지출 점유율은 1992년 53.4%에서 2002년 55%로 상승한 후 2012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
 - 소비 하위 20%의 소비지출 점유율이 소득 기준 시(표 1)보다 크게 나타나, 하층 가구에서는 자산 등이 고려된 항상소득이 단기 소득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임.
- 소비지출 중위값의 50~150%에 속하는 인구를 중산층으로 설정할 경우 중산층 비중은 1992년 76.9%에서 2002년 79.0%로 증가한 이후 2012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

8) 소득으로 빈곤율을 계산할 때와 마찬가지로 균등화·개인화한 소비지출.

<표 2> 소비지출 기준 중산층의 경제력 비중과 중산층 비율

(단위: %)

		1992	2002	2012
소비지출 구간별 소비지출 점유율	상위 20%	36.7	34.7	34.1
	중위 60%	53.4	55.0	55.8
	하위 20%	9.9	10.3	10.1
소비지출 중위값 기준 구간별 인구 비중	150% 이상	18.4	16.3	15.0
	50~150%	76.9	79.0	78.9
	50% 미만	4.7	4.7	6.1

주: 2인 이상 도시가구 대상으로 균등화한 가구소비지출을 개인화하여 계산.

자료: 『도시가계조사』(1992, 2002); 『가계동향조사』(2012).

4) 중산층 압박(middle class squeeze)과 터널효과

□ 중산층 몰락이라는 진단은 지표에 근거하기보다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고단함의 표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감되는 생활의 어려움이나 주관적 인식의 변화도 중산층 정책에서 관심의 대상

○ ‘중산층 압박’은 중산층이 누리는 경제적 자원은 줄어들고 지출소요는 늘어나 박탈감이 증가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사실상 이를 경제학적 논리로 해석하기는 용이하지 않음. 소득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지출결정을 하는 이상, 지출이 많다는 것은 본인이 평가하는 항상소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

○ 터널효과(Hirschman and Rothschild[1973])⁹⁾는 소득의 체감 정도나 지출소요에 외생적인 제약을 가미함으로써 중산층 압박을 해석할 여지를 제공

- 편도 2차선의 터널 속에서 교통이 심하게 정체돼 있다가 마침내 차선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옆 차선의 자동차들만 움직인다면, 정체 차선의 운전자들의 불만이 증폭된다는 것

9) 외부적 요인에 준거점(reference point)이 두어지기 때문에 행복이 자신의 소득이나 소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의해 영향 받는다는 점에서 듀센베리의 상대소득가설(relative income hypothesis)이나 머튼의 상대적 결핍이론(relative depravity) 등과도 일맥상통한다.

- 정채 차선의 운전자는 이러한 상황이 누군가의 반칙 때문인지를 의 심하게 되고, 결국 차선 분리선을 넘는 등 과격한 행동을 취하게 됨.

○ 세계화의 진전 속에서 특정 직종에 속하거나 숙련수준이 높은 근로자의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감지되는 데 비해 나 의 처지는 정체돼 있다면 소외감과 결핍감이 커져 심정적인 중산층 몰락을 초래

-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전 수준의 교육투자로 과거의 안정적 직장이나 상향이동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커져 교육비 지출 역시 증가하기 때문에 재량적 소비가 감소하고, 이는 체감 되는 생활의 질을 떨어뜨림.

□ 1992년 이후 20년간 2인 이상 도시가구 중 소득 중위가구와 상위 25% 가구의 소득과 교육비 지출, 기본적 소비분을 제외한 소득 차이가 큰 폭으 로 증가하여 터널효과로 인한 박탈감이 심화되었을 것으로 추측됨(표 3).

○ 1992년에는 소득 중위가구와 상위 25% 가구의 소득 격차가 74만원이었던 데 비해 2012년에는 121만원

○ 교육비 격차는 12만원에서 31만원으로 약 2.6배 정도로 증가했 고, 식료품, 주거비, 교육비를 제외한 소득 차이도 62만원에서 108만원으로 증가하여 재량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이라는 측면에서도 계층 간 차이가 확대

<표 3> 교육비 격차·기본적 소비를 제외한 소득 격차의 확대

(단위: 만원)

	중위가구와 상위 25% 가구 간 차이		
	1992	2002	2012
가구가처분소득	74	108	121
가구 교육지출	12	18	31
식료품·주거·교육비 제외 가구가처분소득	62	98	108

주: 1) 2인 이상 도시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함.

2) 2012년도 기준 실질금액

자료: 『도시가계조사』(1992, 2002); 『가계동향조사』(2012).

3. 소득분위별 고용 확대가 중산층 규모에 미치는 영향

- 고용률 제고는 빈곤정책이나 중산층 확대전략, 인적자원 정책 모두에 유용하나, 어느 인구그룹을 우선적인 정책대상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이들 목표 간 및 소득계층 간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할 수 있음.
-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에 전체 미취업자의 30.1%가 분포하며, 5분위 가구에는 13.8%(표 4)가 분포
 -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근로무능력인 경우를 제외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미취업자는 모두 근로능력자임.
- 소득 1분위 미취업자 중 59.2%가 65세 이상 고령자이며, 33.4%가 1인가구원, 24%가 노인단독가구원인 것에 비해 3분위는 30~49세가 41.4%로 최대 비중

<표 4> 가구분위별 미취업자의 성별, 연령별, 가구유형별 현황(2011년)

(단위: %, 만명)

			가구소득분위(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					
			전체	1(저)	2	3	4	5(고)
미취업자			1,207	363	263	211	203	167
비중(%)			100	30.1	21.8	17.5	16.8	13.8
소득분위별 미취업자의 각 유형별 비중(%)	성별	남성	28.2 (340)	36.7 (133)	31.8 (83)	24.7 (52)	19.9 (41)	18.5 (31)
		여성	71.8 (867)	63.3 (230)	68.2 (179)	75.3 (159)	80.1 (163)	81.5 (136)
	연령	15~29세	8.5 (103)	4.6 (17)	10.5 (28)	10.4 (22)	12.4 (25)	7.0 (12)
		30~49세	28.7 (346)	13.9 (50)	29.1 (76)	41.4 (87)	37.1 (75)	33.9 (57)
		50~64세	25.8 (312)	22.3 (81)	23.8 (63)	21.4 (45)	30.7 (63)	36.1 (60)
		65세+	36.9 (446)	59.2 (215)	36.6 (96)	26.7 (56)	19.8 (40)	23.0 (38)
	가구 구성	1인가구	13.4 (162)	33.4 (121)	8.6 (22)	5.0 (11)	2.4 (5)	1.4 (2)
		2인가구	28.7 (346)	39.2 (142)	31.9 (84)	21.7 (46)	21.3 (43)	18.3 (31)
		노인단독	9.2 (111)	24.0 (87)	5.6 (15)	2.2 (5)	1.5 (3)	1.1 (2)

주: 1) 미취업자는 '주된 경황상태'가 '실업/비경활자'인 경우이며, 비경활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유가 '근로무능력/군복무/정규교육기관학업/진학준비'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업준비/가사/양육/간병/구직포기/근로 의사無/기타'인 경우만 포함

2) 괄호 안의 수치는 미취업자수(만명)임.

자료: 복지패널 7차자료(beta2).

□ 중산층 확대를 위해 고용률 제고 노력을 시작하려면 타깃그룹과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데,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계층별 효과를 예측해 볼 수 있음.

- 시나리오 0
: 미취업자가 있는 모든 가구에서 1명이 추가로 취업(972만명, 부표 3 참조)
- 시나리오 1
: 미취업자가 있는 1분위(하위 20%) 가구에서 1명이 추가로 취업(273만명)
- 시나리오 2
: 미취업자가 있는 3분위 가구에서 1명이 추가로 취업(181만명)
- 시나리오 3
: 미취업자가 있는 5분위 가구에서 1명이 추가로 취업(140만명)

- 임금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정책적 노력을 통해 일자리(수요)와 노동시장 참가자(공급)를 창출하여 매치시킨다고 가정할 때 현재와 같은 계층별 미취업자 분포하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를 추측해 봄.
 - 미취업자가 빈곤층과 중산층 경계 부근, 중산층과 상층 경계 부분에 어느 만큼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 추가 근로소득이 빈곤율과 중산층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
 - 가구원 중 추가적 취업자가 발생할 경우의 근로소득 증가분은 가구 내 기 취업자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정
 - 가구 내 기 취업자가 있는 경우, 2인 이상 취업자를 가진 동일 소득분위 내 가구에서 첫 번째 근로소득과 두 번째 근로소득 간 비율을 추출하여 추가적 취업자의 근로소득을 계산
- * 1~5분위 각각 48.1%, 49.8%, 50.7%, 52.0%, 52.8%

- 기 취업자가 없는 경우, 취업자가 1명만 있는 동일 소득분위 내 가구에서 취업자 근로소득의 하위 25% 값을 적용

* 1~5분위 각각 연 232만원, 1,222만원, 2,145만원, 3,145만원, 4,460만원

* 이는 현재의 미취업자가 기존 취업자와 비교해 평균적으로 생산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정을 의미

□ 고용률 제고 노력이 소득계층별로 타기팅될 경우, 저소득층 미취업자를 취업시키는 것이 빈곤율과 중산층 비율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그 외 계층은 복합적 영향을 나타냄(표 5).

- (시나리오 1)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미취업자 중 1명을 취업시킬 경우 빈곤율은 13.6%에서 10.3%로 하락하며, 중산층 비중 역시 65.7%에서 68.9%로 상승

- 소득 1분위의 미취업자가 평균적으로 불과 월 20만원 미만의 근로소득을 올리게 되는 시나리오인데도 중산층과 빈곤층의 경계에 있던 가구가 상향이동하게 되어 빈곤율과 중산층 비중이 상당폭 변화

- (시나리오 2) 중간분위 가구 내 미취업자 중 1명을 취업시킬 경우 중산층 비중은 증가하나 빈곤율은 17.5%로 크게 늘어남.

- 이는 맞벌이가 증가하여 중위소득이 늘어날 경우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측정한 빈곤기준도 상승하기 때문

- (시나리오 3) 5분위(상위 20%) 가구의 미취업자 중 1명을 취업시킬 경우 빈곤율에는 영향이 없으며, 중산층으로부터 상향이 탈하는 가구로 인해 중산층 비중은 약간 감소

- (시나리오 0) 전 가구의 미취업자 중 1명을 취업시킬 경우 중위소득 증가로 빈곤율은 증가하나, 중산층의 상향이동으로 중산층 비율은 축소

<표 5> 가구 내 미취업자의 취업 가정에 따른 고용률, 빈곤율, 중산층 비중

(단위: %, 만명)

	2011년 추정치	시나리오			
		0	1	2	3
고용률(15세 이상 기준)	58.2	82.1	64.9	62.6	61.6
고용률(15~64세 기준)	64.0	90.5	70.9	69.0	68.0
빈곤율 (빈곤인구)	13.6 (668)	14.4 (708)	10.3 (507)	17.5 (859)	13.6 (668)
중산층 비중 (중산층 인구)	65.7 (3,327)	62.7 (3,082)	68.9 (3,388)	67.7 (3,325)	64.7 (3,182)

주: 1) 시나리오에 따른 가구 내 미취업자 취업 적용 시 비교령자가 우선 취업하는 것으로 가정.

2) 취업자는 '주된 경황 상태'가 '상용/임시/일용/자활동/고용/자영/무급'인 경우

자료: 복지패널 7차자료(beta2).

4. 분석결과의 함의

□ 중산층의 축소는 중산층의 다양한 개념 중 소득분포의 분산성 (diffusion) 증가에 국한된 관찰임.

○ 중간층의 소득 비중을 관찰하거나 항상소득의 대리변수로 소비 지출을 관찰할 경우 중산층이 축소되는 추세를 확인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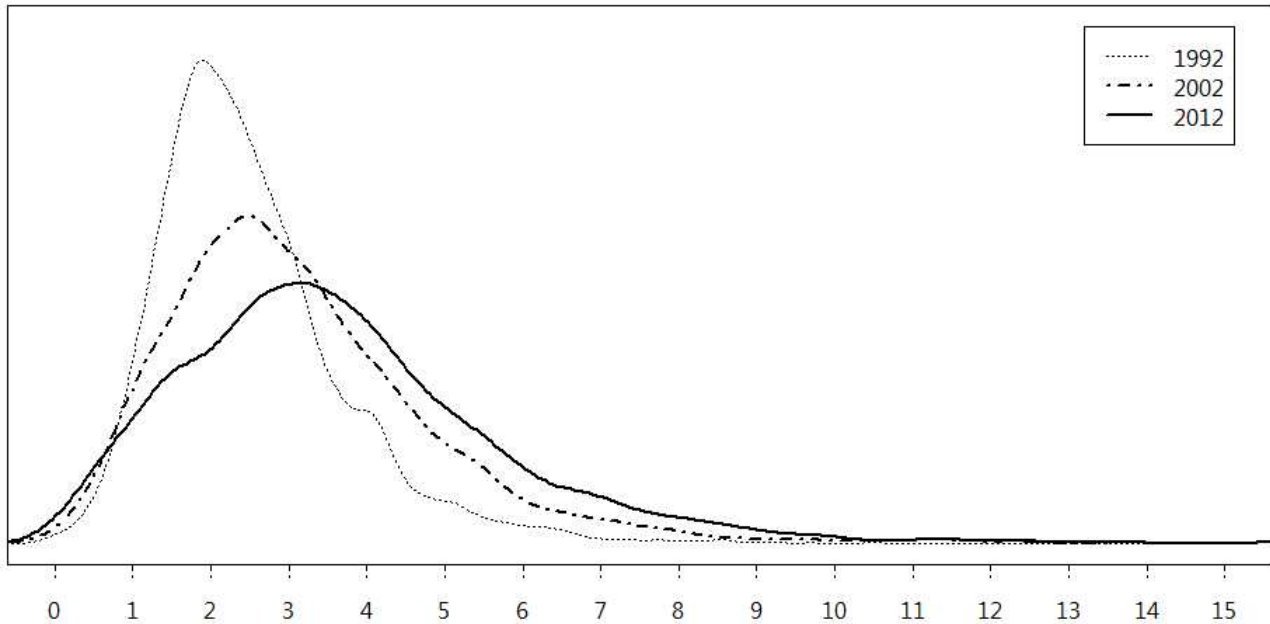
○ 일정 소득 범위에 포함되는 인구 비중을 관찰하거나 분포 상의 두 지점 간 거리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중산층이 최근까지 축소되어 온 것으로 진단되며, 이는 [그림 2]와 같이 소득 분포의 분산성이 확대되어 온 결과임.

○ 이러한 추세는 OECD 국가들에서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으며, 글로벌화와 기술진보 속에서 숙련에 따른 보상의 격차가 커지는 것에 기인한다고 인식됨(OECD[2011]).

- 세계화 속에서 소비기준이 급격히 상승하고 상층부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하는(top driven inequality) 변화는 중간 계층이 느끼는 박탈감에 기여(Birdsall et al.[2000])

- 우리나라는 급격한 탈공업화와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등으로 소득분포 하층부의 분산성 증가가 병행되어 분배 악화에 기여

[그림 2] 2인 이상 도시가구의 가처분소득 분포



주: 가구가처분소득은 2012년도 실질금액(단위: 백만원).
 자료: 『도시가계조사』(1992, 2002); 『가계동향조사』(2012).

□ 소득분포 분산성 증가에 대한 대응은 분포 하층부의 숙련을 증진하여 격차를 줄이고 상향이동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재분배를 통해 하층부를 끌어올리는 것

- 상층부의 숙련 보유자가 시장에서 약진하게 되는 구조가 세계화 및 기술진보 과정에서 숙련에 대한 보상 격차가 증가하는 것에 주로 기인하는 이상, 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는 어려움.
-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층부의 능력을 끌어내리지 않으면서 격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를 위해서는 중·하층부의 숙련을 증진시키는 시스템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 이와 함께 경제 전반의 기술기반을 고도화하여 소득분포 전체를 상향이동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

- 근래의 변화는 소득분포 전체가 상향이동하지 못하고, 하층부가 고정된 상태에서 소득분포의 분산만 증가해 분포 하층(tail)이 두꺼워지는 현상(빈곤 심화)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EITC 등 효과적 재분배와 고용지원을 통해 하층을 지원할 필요
 - 또한 장벽에 의해 그룹 간 이동이 불가능할 때 터널효과(주관적 박탈감)가 강화된다는 점은(Hirschman and Rothschild[1973]) 사회적 이동성을 증진시키는 사회정책방향과 시스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
- 빈곤정책과 중산층 정책이 별개라는 통념과 달리 저소득층 취업지원 은 양 측면 모두에 큰 효과를 가지는 반면, 중간층 지원은 빈곤율을 악화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등 계층별 타기팅의 영향이 상이하기 때문에 종합적 시각이 필요
- 저소득층 미취업자가 취업하게 될 경우 빈곤과 중산층 비중 모두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진입지원에 우선순위가 두어질 필요
 - 저소득층의 미취업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표 4, 부표 3), 저소득층 고령자의 일자리 알선과 훈련지원 등의 정책적 노력이 중요시될 필요
 - 중산층 확대정책과 빈곤정책, 고학력 여성인력의 고용률 제고는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경제 전체의 생산성 제고라는 정책목표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종합적 시각의 정책 조화가 필요
 -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거나 고부가가치 업종의 근무환경을 양성평등/친가족적으로 개선하여 중·상층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진하는 것은 빈곤율이나 중산층 지표에 부정적일 수 있으나 인적 자원 활용과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

- 상층의 고용률 제고는 중산층 비중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은 중산층의 상향이동에 따른 결과로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산층 비중이라는 숫자에 지나치게 매몰될 필요는 없음.

[참고문헌]

- 유경준·최바울,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KDI 재정·사회정책동향』, 제2권 제1호, 2008, pp.84~96.
- 최경수, 『사회통합의 과제와 저소득층 소득향상』, KDI 정책포럼 제191호(2008-03), 한국개발연구원, 2008.
- Acemoglu, D. and F. Zilibotti, “Was Prometheus Unbound by Cha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5(4), 1997, pp.709~751.
- Alesina, A., “Political Models of Macroeconomic Policy and Fiscal Reforms”, in Stephan Haggard and Steven Webb (eds.), *Voting for Reform: Democracy, Political Liberalization and Economic Adjustment*,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Atkinson, Anthony B. and Andrea Brandolini, “On the Identification of the ‘Middle Class’”, MCINEQ Working Paper 2011-217, 2011.
- Banerjee, Abhijit V. and Esther Duflo, “What is Middle Class about the Middle Classes Around the World?” MIT Department of Economics Working Paper 07-29, Cambridge, MA., 2008.
- Becker, Gary S. and Casey B. Mulligan, “The Endogenous Determination of Time Preferenc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3), 1997, pp.729~758.
- Birdsall, N., C. Graham, and S. Pettinato, “Stuck in Tunnel: Is Globalization Muddling the Middle?” Brookings Institution, Working Paper 14, Washington, D.C., 2000.
- Doepke, M. and F. Zilibotti, “Social Class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3, 2005, pp.516~524.
- Doepke, M. and F. Zilibotti, “Occupational Choice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NBER Working Paper, 2007.
- Easterly, William, “The Middle Class Consensus and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Growth* 6, 2001, pp.317~335.
- Hirschman, Albert O. and Michael Rothschild, “The Changing Tolerance for Income Inequality in the Course of Economic Developmen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7(4), 1973, pp.544~566.

Milanovic, B. and S. Yitzhaki, "Decomposing World Income Distribution: Does the World Have a Middle Clas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48(2), 2002, pp.155~178.

Murphy, Kevin M., Andrei Shleifer, and Robert W. Vishny, "Industrialization and the Big Push",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5), 1989, pp.1003~1026.

OECD,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OECD Publishing, 2011, <http://dx.doi.org/10.1787/9789264119536-en>

Ravallion, M., "The Developing World's Bulging (but Vulnerable) Middle Clas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4816, The World Bank, 2009.

Thurow, L., "A Surge in Inequality", *Scientific America* 256, 1987, pp.30~37.

<부표 1> 소득계층별 가처분소득 점유율 비교

(단위: %)

국가명	중위 60%	하위 20%	상위 20%
한국	56.0	7.1	36.9
덴마크	57.1	10.1	32.8
스웨덴	56.3	10.0	33.7
핀란드	55.4	9.7	34.9
노르웨이	55.3	9.5	35.2
룩셈부르크	54.6	9.2	36.3
오스트리아	54.4	9.2	36.3
프랑스	54.2	8.8	37.1
독일	54.1	8.9	37.0
캐나다	53.5	7.3	39.2
대만	52.8	8.2	39.0
폴란드	52.6	7.6	39.9
이탈리아	51.8	7.2	41.0
미국	51.1	5.8	43.1
영국	50.8	7.3	41.9
멕시코	44.3	4.5	51.2

주: Atkinson and Brandolini(2011)와 동일한 방식으로 특이치를 제거하기 위해 가구가처분소득을 균등화하고 개인화한 평균의 1% 이하를 bottom-coding, 가구가처분소득 중간값의 10배 이상을 top-coding.

<부표 2> 가구소득분위별 주관적 소득계층 현황

(단위: %)

		주관적 소득계층				
		1(저)	2	3	4	5(고)
가구 소득 분위	전체	24.5	37.2	33.8	4.1	0.3
	1(저)	59.6	29.2	10.3	0.5	-
	2	32.8	46.6	20.0	0.5	0.0
	3	18.9	44.4	35.4	1.3	-
	4	8.1	39.4	49.2	3.1	0.2
	5(고)	3.2	26.4	53.9	15.0	1.5

주: 1) 『귀택의 가구는 다음 중 어느 소득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하위(하류)층 ② 중하층 ③ 중간층 ④ 중상층 ⑤ 상위(상류)층』 문항 이용.

2) 가구소득분위는 균등화된 가구가처분소득 기준으로 균등하게 5개 분위로 나눔.

자료: 복지패널 7차자료(beta2).

<부표 3> 가구분위별 취업자 및 미취업자가 있는 가구 현황(2011년)

(단위: %, 만호)

	가구소득분위(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					
	전체	1(저)	2	3	4	5(고)
취업자가 있는 가구 비중	82.1 (1,427)	41.0 (143)	83.7 (291)	92.7 (322)	95.4 (332)	97.6 (339)
미취업자가 있는 가구 비중	55.9 (972)	78.7 (273)	58.5 (203)	52.2 (181)	49.9 (174)	40.3 (140)
비경활자가 있는 가구 비중	54.6 (949)	76.8 (267)	57.5 (200)	51.0 (177)	48.3 (168)	39.6 (138)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가구 수(만호)로 전체 가구 수 추정치는 1,738만호이며, 분위별로는 각각 348, 348, 347, 348, 348만호임.

2) 취업자는 '주된 경황 상태'가 '상용/임시/일용/자활등/고용/자영/무급'인 경우로 정의.

3) 미취업자는 '주된 경황상태'가 '실업/비경활자'인 경우인데, 비경활자는 사유가 '근로무능력/군복무/정규교육기관학업/진학준비'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업준비/가사/양육/간병/구직포기/근로 의사無/기타'인 경우만 포함.

4) 비경활자와 실업자가 모두 있는 가구의 비중은 전체 및 1~5분위 각각 1.0, 1.4, 1.5, 1.0, 0.7, 0.4%임.

자료: 복지패널 7차자료(beta2).